

『2021년 민생규제 혁신 과제』 작성 서식 및 예시

□ 작성 서식

접수부서에서 작성

② 전문가 제안용

접수자				관리번호
기관 (부서)	00시도 00시군구 (00과)	연락처	044-205-0000	1

「2021년 민생규제 혁신」 과제 제안서 (전문가 제안용)					
(해당란 작성 및 체크☑)					
1. 제안자					
성명			연락처	010-0000-0000	
E-mail			지역		
소속			비고(참여 위원회 등)		
2. 제안 내용					
분 야	①국민 복지	②일상 생활	③취업·일자리	④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⑤신산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제도 및 지침 등 기재				
소관기관	※ 접수부서에서 확인, 작성				
현황 및 문제점	<input type="radio"/>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input type="radio"/>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 반드시 작성				
개선 방안	<input type="radio"/>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input type="radio"/> ★참고) 현행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작성 요망				
기대 효과	<input type="radio"/>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input type="radio"/>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div style="text-align: right;">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div>					
2021년 월 일					
제안자 :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HY헤드라인 15p)

★ 반드시 작성

※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작성 요망

〈법률·지침명〉

현행	개정안

□ 작성 예시

② 전문가 제안용

접수자				관리번호
기관 (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법무담당관)	연락처	02-2025-0000	2

「2021년 민생규제 혁신」 과제 제안서 [전문가 제안용] (해당란 작성 및 체크☑)					
1. 제안자					
성명	최전문		연락처	010-3211-4321	
E-mail	ch@nabi.com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속/ 직위	대한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비고(참여 위원회 등)	환경관리위원회 위원	
2. 제안 내용					
분 야	①국민 복지	②일상 생활	③취업·일자리	④생활·환경·안전	⑤신산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제 목	영농폐기물 중 폐반사필름류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도입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제13조의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소관기관	환경부				
현황 및 문제점	<p><input type="checkbox"/> 현 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 농약 빈병 등은 재활용 품목(EPR 대상품목)으로, 농민이 마을집하장에 모아 두면, 환경공단에서 순회수거 후 수거 보상금 지급 <p>< 생산자책임(EPR) 재활용 제도 ></p> <p>생산자가 제품생산시 폐기물 회수·처리에 대한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 사후 폐기물 회수처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를 대신 회수 및 처리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본 제도 시행 후 폐기물 회수율이 높아짐)</p> <p>< 반사필름이란? ></p> <p>과수열매가 잘 익도록 지면에서 햇빛을 반사시키는 은박필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수,인삼 등 원예농가에서 사용 후 매년 반복 배출되는 반사필름폐기물은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EPR대상 협약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회수가 되지 않고 있으며, 농경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p><input type="checkbox"/> 문 제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따라 영농 후, 농가에서 일일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특히 일시에 많은 종량제봉투 구입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대부분 농가에서는 농업부산물과 함께 경작지에서 소각 또는 방치하는 등 봄철 산불발생 및 제2의 환경오염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실제로 은박필름이 날려 나뭇가지에 걸쳐 있거나, 전선에 엉킬 경우 정전 등 현장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 및 배출불편 해소, 그리고 이에 따른 산불 및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하여는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배출 및 재활용 체계(EPR제도) 도입이 시급.
<p style="text-align: center;">개선 방안</p>	<p><input type="checkbox"/> 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영농행위에서 발생하는 반사필름폐기물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협약품목으로 지정·수거처리하고, 회수율 제고에 따른 수거 및 처리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EPR 대상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반사필름류폐기물은 재활용으로 분류되어, 농민이 현재 생활폐기물로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농경지 방치 및 불법소각 근절 유도정책 도입 ○ 이를 위해서는 영농폐기물 재활용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반사필름폐기물은 석탄(약4,000kcal/kg) 또는 고형연료(3,500kcal/kg)보다 발열량이 우수(약9,000kcal/kg)하여 고형연료(SRF)로 활용하여 화력발전소, 제지플랜트, 시멘트 소성로 등의 연료로 재활용 가능 <p>< 지자체(제천시) 재활용 관련 사례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영농폐기물(반사필름) 시멘트 소성로 열료 재탄생!(연합뉴스,2017.3.6)</p> <p>▶ 영농폐기물 연료로 재활용!(대전MBC,KBS충주,MBC충북방송, 2017.3.6)</p> <p>① 배 출 자 : 과수, 인삼 농가 등 600 세대 ⇒ 수집(무상배출)</p> <p>② 수집운반 : 제천시(자원관리센터) ⇒ 일정기간 수집 후 열원 공급</p> <p>③ 처 리 자 : 아세아시멘트(주) ⇒ 파쇄 후 소성로 열원 전량 재활용</p> <p>▶ 제천시 : 무상 수거기간 지정 운영(2017.3.20 ~ 3.31)</p> <p>- 600여 과수농가에서 약 200 ~ 300여톤 수거 예정</p> </div> <p>※ 현재까지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전국적으로 약 10,000여톤 내외의 반사필름폐기물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됨.</p>
<p style="text-align: center;">기대 효과</p>	<p><input type="checkbox"/>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규정에 의한 “폐자원에너지”로 농업용 반사필름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 폐반사필름 영농폐기물 EPR 협약품목으로 지정 후, 수거 및 처리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므로써, 발생 영농폐기물을 전량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년 3월 일

제안자 : 최전문

★ 반드시 작성

〈사례-생수병 비닐라벨 관련 현황자료〉

1. 먹는물관리법 제2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알맞은 지도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출처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79호, 시행 2019. 6. 25.] 환경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2. 생수 시장 점유율 1위 삼다수의 지나친 수준의 평균판매가격

삼다수 2L 판매가 대비 이익률 지나치게 높아

생수의 제조 원가를 추정하기 위해 국내 생수시장 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하는 삼다수의 제조업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3개년도 손익계산서를 활용했다. 2017년 재무제표상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매출원가를 제조원가로 가정, 제품매출원가를 판매량으로 나눠 단위당 원가로 환산했다.

또 유통업체 납품 이후의 부분은 삼다수의 유통사인 광동제약의 2017년 재무제표 상 판매비와 관리비(이하 판관비)를 판매량으로 나눠 단위당 판관비를 환산했다. 그 결과 삼다수의 유통 이전 제조 원가는 2L당 약 414원, 유통 이후 원가라 할 수 있는 단위당 판관비는 약 114원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시장 점유율 1위인 삼다수의 추정원가는 2L당 약 529원이고, 평균판매가격은 1165원이므로 이익률은 54%로 추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재무상태로 비교해 보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7년 기업경영분석 보고서의 음료업계 제품원가율이 56%, 영업이익률은 10%인 것에 비하면 앞에서 추정된 삼다수의 추정 이익률은 동종업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가격인하의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8월, 삼다수는 출고가를 6~10% 인상했다. 그러나 삼다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주요 원재료 품목의 단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매출원가가 상승하기는 했으나, 판매단가 변동 없이 매출액이 증가해 실질적으로 이익률은 변동이 없었다.

협의회 측은 "원자재가격상승을 이유로 단행한 이번 가격 인상폭은 검토결과 과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지역 공사로써 수익성뿐 아니라 공공성도 창출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 전쟁'이라 할 만큼 자리차지 싸움이 치열한 생수 시장에서 업체들은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고가의 모델을 고용하기 위한 광고 선전비와 소매유통업을 통한 영업활동비용 때문에 소비자가 갈수록 비싼 생수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업계 선두 브랜드인 삼다수는 생수의 성분을 통한 기능적 차별성과 가격을 통한 경제적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이번 원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한 가격 인상과 과도한 홍보활동 생수 업체들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료업계 영업이익률은 10%, 삼다수는 54%

-같은 수원지임에도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

http://m.bokuennews.com/m/m_article.html?no=168941

※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작성 요망

〈사례-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현행	개정안
제6조(시·군·구별 지정면적) ① (생략) 다만, 입지수요의 증가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군·구별 지정면적 범위를 1백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확대할 수 있다.	제6조(시·군·구별 지정면적) ① ----- ----- ----- -----시·군·구별 지정면적 범위를 1백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확대할 수 있다.수 있으며, 기준면적은 시군구별 지정면적 또는 단지별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단지별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 이하에서 확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구별 기준 단지의 현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② ----- ----- ----- -----다만, 단지별의 지정면적 확대는 다음 각 호를 해당단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을 합산한 면적이 분양대상면적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분양대상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지는 총 지정면적을 분양대상면적으로 본다.	1. <u>단지별 다음</u> ----- -----, -----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휴·폐업업체가 입주업체수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2. <u>단지별 휴·폐업업체</u> ----- -----
3. 분양대상면적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실수요자의 입주수요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u>단지별 분양대상면적</u> ----- ----- -----